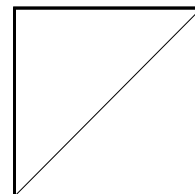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13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11. 12. (제 20 차)	

신한금융투자(주)에 대한
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1. 11. 12.

1. 의결주문

신한금융투자(주)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신한금융투자(주)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‘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’, ‘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’, ‘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’에 대하여 신한금융투자(주)에 대해 ‘업무의 일부 정지(6월)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, 관련 전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‘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’ 또는 ‘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면직 상당)’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(붙임)

- 「자본시장법」 제44조(이해상충의 관리) 제1항, 제2항, 제3항
- 「자본시장법」 제49조(부당권유의 금지) 제1호, 제2호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

「자본시장법」 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제3항
 「자본시장법」 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제1항, 제2항, 제3항
 「자본시장법」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
 「(구)자본시장법(2017.4.18.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」 제449조
 (과태료) 제1항 제29호
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4호 마목, 제7호
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<별표22>
 「(구)자본시장법 시행령(2017.10.17.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」
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<별표22>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9조(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) 제5호
- 「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<별표3>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
 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
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24차~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10.29., 11.5., 11.10.) 심의필
- 제21차, 제2차, 제3차 및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(2020.11.25.,
 2021.1.20., 2.3., 2.8.) 심의필
- 제4차, 제5차, 제7차, 제14차 및 제20차 안전검토 소위원회
 (2021.2.26., 3.12., 4.9., 7.16., 11.5.) 심의필
- 청문 실시(2021.8.6.)

<별지>

신한금융투자(주)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신한금융투자(주) : 업무의 일부* 정지 6월 및 과태료 2,540백만원** 부과

- * i)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와의 신규 토탈 리턴 스왑 계약 체결
- ii)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(사모펀드 신규판매)
- iii)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 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체결

*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◆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수정 심의

-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중 ■■■■펀드 기준가격 조작행위 △△건은 감추어 주는 대상이 되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
- 실권주를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한 불건전 인수행위는 기존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 면제 가능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

☞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내용에 따라 의결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합계액은 1,800백만원임

- 조치사유(업무의 일부 정지 6월) :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,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

- 조치사유(과태료) :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,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, 제49조 제1호 제2호, 제71조 제7호, 제420조 제3항, 제449조 제1항 제29호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, 제7호, 제390조 <별표22>
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9조 제5호

□ 임원에 대한 조치

- (前대표이사 ○○○○)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
 - 조치사유 :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,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
 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, 제71조 제7호, 제49조 제1호 제2호, 제422조 제1항 제3항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7호

□ 직원에 대한 조치

- (前본부장 ◇◇◇◇)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면직 상당)
 - 조치사유 :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
 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, 제71조 제7호, 제422조 제2항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7호

2. 조치사유

가.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- ○○○○○본부는 20××.×월~20××.×월 기간동안 ◆◆자산운용(이하 ‘◆◆’)이 ■■■■■■■■■와 ■■■■□□□□ 등 △개 ■■■■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고 ◆◆ △△△△펀드(20××.×말 기준 ■■■개, 장부가액 합계 ■■■■억원, 이하 ‘◆◆ 펀드’)의 기준가격을 과대계상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한금융투자(주)와 TRS 계약상대방 펀드간, TRS 계약상대방 펀드 상호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◆◆ 및 ◆◆펀드의 위법한 거래*를 도와줌으로써, 신한금융투자(주) 고유재산의 손실(최대 ☆☆☆억원)을 회피하고 ◆◆이 ○○○○명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△△△△억원의 신규펀드를 설정**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

* 특경법상 사기, 자본시장법상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등

** ◆◆(▽▽▽, ♥♥♥)의 공소장(사기) 내용 참고

- i) ○○○○○본부는 20××.×월부터 ‘◆◆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’ 등 각각 △△개 ◆◆ 펀드의 계산과 신한금융투자(주)의 명의로 ■■■■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던 중, 20××.×월 이후 ■■■■펀드의 사무수탁사(目目目)로부터 △개 ■■■■펀드(20××.××.××. 기준 장부가액 ■■■■억원*)의 기준가격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,

* △△개 ◆◆ 펀드 투자금액 총 ■■■■억원(설정액 ▲▲▲▲억원)의 약 〇% 규모

- ◆◆과 협의하여 20××.×.××. 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 및 ■■■■□□□□의 20××.×월말 기준가격을 각각 전월('××.×월) 대비 ○% 및 ○% 상승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는 등 20××.×.××. ~ 20××.×.××.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△개 ■■■■ 펀드에서 매월 +○~○%씩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기준가격을 조작하고 조작된 기준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TRS 평가가격을 ◆◆과 ◆◆ 펀드의 신탁업자 등에게 각각 제공하였으며,

- 20××.×.××.~×.××. 기간 중 ◆◆과 함께 ■■■■운용사를 방문하여 총 ○억 달러(20××년말 장부금액 기준)에서 약 ○억 달러*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

* 출장당시 ■■■■운용사 담당자가 설명한 손실규모

- 20××.×.××. 조작했던 기준가격을 20××.×월말 수준(사무수탁사가 보낸 최종 기준가격)으로 단순 하향 조정한 후, ■■■■펀드 매각 사실을 전산에 반영한 20××.×.×.까지 부적절한 TRS 평가가격을 산출하여 ◆◆과 ◆◆ 펀드의 신탁업자 등에게 각각 제공함으로써

- 잘못된 TRS 평가가격을 토대로 ◆◆ 펀드의 기준가격이 과대 평가되었고 ◆◆펀드의 투자자산(■■■■펀드)에서 거액의 손실*이 발생한 사실이 은폐되었음

* 신한금투는 20××년 결산시 ■■■■펀드 관련 자산(▽▽▽ 수익증권)을 "♥"로 평가

ii) ○○○○○본부는 20××.××.××. ■■■■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■■■■ 펀드의 기준가 산정 중단과 20××.×.××.부터 환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, 펀드가치에 상당한 손실 발생 개연성*이 높다는 사실 등을 통보받게 되자,

* We believe that various factors have resulted and will likely to result in significant impairment to the value of the portfolio in an amount that we can't currently determine

- 20xx.xx.xx.부터 **◆◆**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환매 예정펀드의 **■■■**펀드 투자비중이 높아 환매자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TRS계약을 종료하지 않을 경우 **■■■**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거금을 초과하는 △개 **◆◆** 펀드와의 TRS 계약에서 고유재산 손실(최대 **□□□**억원)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
 - **■■■** 펀드에 투자한 △△개 **◆◆** 펀드(투자비중 ○~●%)의 환매 필요자금을 **■■■**펀드를 보유하지 않아 자산 현금화가 용이한 다른 펀드로부터 조달하고 **■■■**펀드 관련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
 - △△개 **◆◆** 펀드의 계산과 신한금융투자(주) 명의로 각각 △2개 **■■■**펀드 등 △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TRS계약을 종료(20xx.xx.xx.)한 후, 동 △△개 **◆◆** 펀드 재산의 대부분(▲▲▲억원)을 ‘**◆◆ □□□-□□ □호**’에 투자하고 동 펀드의 계산과 신한금융투자(주) 명의로 △개 **■■■**펀드 등 △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TRS 거래(20xx.xx.xx.)를 하는 방식으로 △△개* **◆◆** 펀드를 사실상 합병(1차 구조화) 하였음
- * **◆◆ □□□-□□ □호** 포함('xx.xx.xx.설정, 설정액 △△△억원)
- 이로 인해 환매가능자금이 크게 부족했던 ‘**◆◆ ○○○ ○○○○ ○호**’ 및 ‘**◆◆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호**’의 20xx.xx.xx.자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해졌으며, i)에서 설명한 **■■■**펀드 임의조작을 통해 **■■■**펀드의 부실이 은폐되고 ‘**◆◆ □□□-□□ □호**’의 기준가격이 과대평가되어 20xx.xx.xx.~20xx.x.xx. 기간 중 ‘**◆◆ □□□-□□ 1호**’에 투자하는 총 17개(**■■■**억원) **◆◆ ▽▽▽▽▽**의 추가 설정이 가능케 되었음
 - 또한 이 과정에서 △개 **■■■**펀드의 부실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아 이에 투자한 △△개 **◆◆**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

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,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,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지 않고 △△개 ◆◆펀드와 체결했던 TRS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TRS거래를 함으로써,

- 신한금융투자(주) 고유재산(■●●●●억원)과 ■■■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은 투자자(☒☒☒억원)*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■■■펀드에 투자하지 않거나(□□□□□억원) 투자비중이 낮은(▮▮억원)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

* 투자구조 변경 전 ■■■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, 투자구조 변경 후 '◆◆◆■■■■-■■■ 1호'의 ■■■펀드의 투자비중인 x% 보다 큰 ☘☘개 펀드의 투자자

- iii) ○○○○○본부는 △개 ■■■펀드(장부가액 기준 ○○ 달러)에서의 △△달러 상당의 부실발생 사실을 확인(19.×월)한 이후, ‘◆◆■■■■■호의 계산과 신한금융투자(주)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△개 ■■■펀드와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(♥♥♥ 등 약 ◇◇ 달러)를 합계 ◆◆ 달러에 매각하고, 액면금액이 △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익과 연계*되도록 설계된 약속어음(Promissory Note, P-NOTE)을 보유(2차 구조화)할 목적으로 ◆◆과 함께 싱가포르 소재 ☆☆☆☆☆社와 3자** 간 협약(Indicative Term Sheet)에 20××.×.××. 서명하였는데,

*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의 수익 금액에 따라 P-NOTE 액면가액 및 이자를 감액하는 조건 및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전액 환매할때까지 P-NOTE의 만기 연장, ■■■운용사로부터 '19.×월말까지 수익증권 이전동의를 받지 못하면 P-NOTE 액면가를 감액(○○달러)하는 조건이 있었으며, 실제 이전 동의를 받지 못하여 '××.×월 P-NOTE 금액이 ◇◇달러로 감액되었음

** 신한금융투자 ○○○○○본부장 ◇◇◇◇, ◆◆◆자산운용 ♥♥♥ 부사장, ☆☆☆☆☆
대표 ♣♣♣가 서명날인

- 신한금융투자(주)의 내부 규정(리스크가이드라인)은 TRS거래의

기초자산으로 약속어음(P-NOTE)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,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◆◆으로 하여금 케이만에 △개 역외펀드(▽▽▽Ⅰ~▽▽▽Ⅲ)를 각각 설립하도록 하고 20××.×.××.* 신한금융투자(주) 명의로 보유중인 ■■■■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역외펀드에 현물출자**하였으며,

* ◆◆이 현물출자관련 운용지시를 한 날

** ▽▽▽Ⅰ 및 ▽▽▽Ⅱ, ▽▽▽Ⅲ의 운용자(GP)가 ◆◆이기 때문에 TRS를 통해 운용되는 펀드자금의 관리·통제권한은 종전 신한금투에서 ◆◆으로 이전되는 결과

- ◆◆은 이를 토대로 20××.×.××. 동 역외펀드를 통해 ☆☆☆☆☆社와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각계약을 체결*하고, 20××.×.××.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을 ☆☆☆☆☆社가 설립한 SPC (△△△△)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PC 발행 액면 ◆◆ 달러 상당의 약속어음(P-NOTE)**을 취득한 결과,

* ☆☆☆☆☆社와의 계약은 △개 역외펀드의 운용자(GP) 자격으로 ◆◆이 체결

** ☆☆☆☆☆와 ☆☆☆☆☆의 관계사인 ☎☎☎이 지급보증

- 20××.×.××. 3자간 협약 당시부터 ■■■■펀드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만기시 ◆◆ 달러에 달하는 액면금액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내부 리스크가이드라인을 회피하여 ‘◆◆ □□□-□□ □호’의 투자대상 자산을 약속어음으로 변경하는 거래를 도와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◆◆의 △△△△ 추가 설정*이 가능케 되었음

* '19.×.××. ◆◆ △△△△ 12호 ◇◇◇억원 신규 설정

나.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

(1) 라임 무역금융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○○○○○본부*는 20××.××.××. 및 2018.××.××. ‘◆◆◆ ◆◆◆◆ ◆◆◆◆◆ ◆◆호’ 등 △개 신규 펀드를 판매(○○명, ○○○억원)하는 과정에서,

* 펀드상품 판매 주관부서는 ◇◇◇◇◇이나, ◆◆펀드의 경우 ○○○○○본부가 설정초기부터 판매에 관여(화상회의, 지점 설명회, 요약안내서 작성 등)하였고, TRS거래를 통해 ◆◆펀드의 부실발생, 투자구조 변경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당권유의 주체를 ○○○○○본부로 판단

■ ■ ■ 펀드 부실 인지 후, ◆ ◆ △ △ △ △ 펀드 판매현황

(단위 : 억원, 명)

펀드명	판매일	금액	고객수
◆ ◆ ◆ ◆ ◆ 1호	'18. × ×. × ×.	■	□
◆ ◆ ◆ ◆ ◆ 1호	'18. × ×. × ×.	■	□
◆ ◆ ◆ ◆ ◆ 2호	'18. × ×. × ×.	■	□
소계		■	□

① ◆ ◆ 펀드의 투자자산 중 약 ○%의 비중을 차지하는 ■ ■ ■ 펀드의 기준가격을 특별한 사유없이 20××.×월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등 펀드 운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, 특히 20××.××.××. 수신한 이메일을 통해 ■ ■ ■ 펀드에서 환매 중단 발생 사실과 심각한 부실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음에도

- 투자권유시 활용되는 상품제안서* 및 요약안내서**에 ■■■펀드의 목표수익률이 7%이고 ◇◇, ○○○, ■■■, △△△에 3:3:2:2로 투자하는 경우 예상수익률이 6.4%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술하고

* ◆◆이 작성하여 판매사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신한금융투자는 거짓기재를 알면서도 설명자료로 활용

** 판매직원에게 판매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는 자료

- 판매직원 대상 화상회의(20××.××.××. 및 ××.××.)에서도 ■■■펀드가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,

- ② 신규 펀드(3개)가 모펀드에 해당하는 ‘◆◆ □□□-□□ □호’에 투자하고, 동 모펀드가 TRS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다는 사실과, 판매당시 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200% (20××.××.××. ◆%, 20××.××.××. ●%)를 초과하고 있는 등 최대 레버리지 비율이 ♥%*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

* 내규 ‘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’의 스왑거래 유지증거금(♠%) 기준, 실제 20××.××.××.~20××.×.××. 기간 중 레버리지 비율은 ♠~♣%임

- 제안서 및 요약안내서에 동 펀드가 TRS계약으로 직접 ■■■, ◇◇, ○○○, △△△펀드에 투자하며 최대 레버리지 비율이 200%라는 거짓의 내용을 기술함으로써
- 판매직원들이 ◆◆펀드의 부실발생 사실과 투자구조 등을 알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상품설명을 하였고, 투자자가 거짓의 내용을 기초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

(2)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- □□부는 20××.×.××. ~ 20×.××.××. 기간중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총 ○○○○억원(미상환잔액 ◇◇◇◇◇억원)의 독일 헤리티지 DLS*를 □□ 등 110개 지점을 통해 총 ♥♥♥♥♥명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,

* 독일 전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아파트로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(브릿지론)하는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(NAV)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

- ① 해당 상품이 본 PF대출 전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PF대출보다 위험이 높고,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및 분양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

- 현지 시행사(◇◇ ◇◇◇◇◇◇◇◇)의 재무능력에 대한 검증·확인 과정 없이 판매직원용 상품제안서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“2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현지 Developer인 ◇◇◇◇◇◇◇◇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”이라고 붉은 글씨로 강조하였고,
- 판매직원 대상 화상회의(20××.×.××. 및 20××.×.××.)에서도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만기시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여 설명하였고,

※ 제안서 내 신용평가서에 기술된 시행사의 20××년말 재무현황(총자산 ■■■■억원, 자기자본 ■■■■억원)을 참고할 경우,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

보기는 어려움

- ② 동 상품 판매 초기(20××.×.××.)에 법무법인(■■■)이 담보관련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, 시행사의 후순위(20%)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, 투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·확인과정 없이

- 판매직원 대상 화상회의, 상품제안서 및 상품설명서 등에 시행사의 후순위 투자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으로 투자원금의 95% 가격으로 매각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

※ 시행사의 후순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, 검사종료일(20××.××.××.) 현재 담보권 실행이 즉시 가능한 사업장은 ■■개 중 ▲▲개에 불과(나머지 ◇개 중 ◆개는 임시담보 확보)

- ③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독일 현지 투자대상자산에 대해 산정한 현재 및 미래가치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물건이 선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·확인과정 없이

- 판매직원 대상 화상회의, 상품제안서 및 상품설명서 등에 “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, 현재가치 대비 미래 매각가격이 4~5배되는 자산에 투자”한다고 설명함으로써,

※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물건은 전체 ■■건 중 ▲건에 불과하였고, 나머지 중 ◇◇건은 시행사의 관계사로 보이는 독일현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것으로 확인됨. 한편, 신한금융투자 내부자료(20××.×.××. 임시이사회 참고자료)에 의하면 회수예상율은 ◇◇% 수준에 불과

- 판매직원들이 투자자에게 “2년, 13.6% 확정금리의 원금손실 리스크가 매우 낮은 안전한 상품”으로 설명하였고 투자자들은

동 설명에 근거하여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고 투자하는 결과가
초래되었음

다.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

-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
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 취득한 동
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되는데도
- 신한금융투자(주)는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
수행하면서 20××.×.××.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■■■■■■■■주
를 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, 상장일(20××.×.××.)로부터 25일
이 경과한 20××.×.××.에 동 주식 중 ▲▲▲▲▲▲주(△억원)를 처
분한 사실이 있음

(붙임)

관계 법규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44조(이해상충의 관리)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,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고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함

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

제49조(부당권유의 금지)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1.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
2.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

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·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
2.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·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
 5.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6.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8.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산한다.
-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 2. 신탁계약,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
 3.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
 4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 5. 기관경고
 6. 기관주의
 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
5. 경고

6. 주의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·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

[별표1]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·변경 명령의 사유

- 43. 제44조를 위반하여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8. 제4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79.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4.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·사모·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마.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- 7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7.10.17.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토. 법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□ 금융투자업규정

제4-19조(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)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5.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 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

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동기** 위반결과*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* 중대 :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, 금융기관 손실초래, 건전금융질서 저해

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경미 :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** 상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중 :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

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나. 감경 사유

- (3)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5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(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)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5. 과태료 부과 면제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4) 공무원(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)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,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8조(위법성의 착오)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8조(위법성의 착오)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

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5